

‘여성지위개선은 각 부문 대표성 확대로’

할당제연대, 정부기관 30% 여성할당 촉구

여 95.10.13



6.27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방의회 여성의석 확대에 비중을 두어 왔던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할당제연대. 공동대표 이연숙 이미경)’의 활동이 정부·공공부문 고용할당제로 반경을 넓히고 있다.

할당제연대는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여성연대 대표자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공공부문 여성고용할당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이미경 대표는 “할당제연대는 지방선거 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여성의 대표성을 중앙정부로 확대하고, 단순, 보조적인 업무에만 배치되어 의사결정직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여성의 고용 현실을 타개하는 고용, 승진 및 직업훈련에서의 할당제 도입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할당제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이제 정부가 나서 북경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한 여성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행동강령을 구체화해야 한다”면서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중 공공기관에서 여성인력 채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도 공공부문에서의 여성할당제를 행정적으로 유도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입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할당제연대는 현재 5급 이상의 공무원 가운데 여성비율이 1.9%로 매우 낮다고 지적하고 2천년까지 연간계획을 세워 UN의 권고할당율인 30%가 되도록 한시적으로 채용과 승진에서 여성할당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정부와 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업기술훈련 및 재취업 훈련에서 전통적인 남성 직종부터 우선 30%를 여성에게 할당해 직종에 따른 성별분리 현상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할당제연대는 회의를 마친 후 지난 6.27 지방선거에 참여한 여성후보자들을 격려하는 축하회를 가졌다.